

고등교육 무상교육의 당위성 과 실현 전략

-국립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최인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경북대학교 교수)

대학교육 무상화는 필요하고 가능하다!

- 정부의 낮은 재정지원은 고등교육의 선진화를 방해한다.
 - 2020년: 0.7% (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정부재원 비율; OECD: 1%)
- 고등교육의 강화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 대학 등록금 수준의 격차는 수도권과 지역의 교육여건의 격차를 더 악화시킨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이미 일반 교육화 되었다.
 - 청년층(25-34) 69.6% (OECD: 47.2%)
- 전략: 지역의 국립대·학전문대학 >> 지역 건전 사립대학

무상교육은 국가경쟁력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평가결과
 - 우리나라 대학경쟁력: 대학교육 (2023: 49위; 2024: 46위(67개국 중))
- 국립대학 무상교육은 우리 정부의 낮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액을 높임으로써, 우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무너져 가는 지역의 국립대학에 소속된 대학원 육성을 통해 연구 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양성이 가능해진다.

국립대학 무상교육: 지방소멸 해결의 실마리

위치	거점국립대학	국가중심대학	교육대학	특수목적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대	한국체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		한경대학교		
인천			경인교대	
강원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춘천교대	
충청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청주교대, 공주교대	교원대학교
경상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부경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한국해양대학교
전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교대, 전주교대	목포해양대학교
제주	제주대학교			

왜 국립대학인가?

- 국립대학은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정부; 대학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이 민간에서 나오는 사립대학과는 구별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들의 경쟁력이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
- 국립대학은 모든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고등교육 공공성의 상징이 되어야 함.
- 향후 건전 사립대학으로의 확대를 위한 교두보

문제는 재원이 아니라 의지

- 국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은 수도권 사립대학의 54% 수준
- 국가장학금: 국립대학 학부생들의 등록금 자부담률 또한 전체 등록금의 30%
-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장학금 재원의 잉여
- 대교협: 현재 국가장학금이 32조; 2조6천억을 추가 시 2026년 전면적 무상등록금화가 가능
- 국교조 추산: 국립대학 학부의 전면 무상화: 2028년 4천억원

정책방향: 국립대학교 육성 →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 정부는 국립대학의 육성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이 국가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힌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목표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계획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국립대학 무상교육 정책이다. 국가가 운영과 육성에 책임을 지는 국립대학부터 제대로 된 의무를 다한다면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대학들도 결국 이에 맞추어 대학 정상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방향: 국립대학교 1인당 교육비를 수도권 주요 대학교 수준으로

- 1인당교육비 (2023,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 서울대: 5804만원
 - 연세대: 3994만원
 - 고려대: 3209만원
 - 성균관대: 3017만원
- 지방거점국립대9개교: 2230만원
 - 경북대: 2384만원
 - 부산대: 2313만원
 - 전남대: 2412만원

정책방향: 무상교육이 재정압박으로 연결된 반값 등록금의 재현은 안된다.

- 거점국립대학의 경우 2008년 대비 2018년의 순등록금이 54%에 불과
- 정부는 2011년에서 2018년 까지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400억원 정도 늘렸지만 그 전체를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충당
- 등록금 실시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의 몫으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이 쇠퇴하는 주요 원인
- 독자적 예산의 확보가 관건

국립대학 무상교육 추진계획

- 2025년 : 학부 4학년 및 대학원 1학년 무상교육 시행
- 2026년 : 학부 3, 4학년 및 대학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 2027년 : 학부 2, 3, 4학년 및 대학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 2028년 : 학부 및 대학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필요예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장학금의 잉여분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국립대학 재학생 현황 및 자부담 률

- 국립대학교 학부 재학생 수 : 376,835 명 (방송통신대 92,075명 포함)
- 국립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수: 60,000 명(추정: 석박사 포함)
- 국립대학교 등록금 평균액 :
 - 414만 8천원 (2023년 방통대 제외 37개 국립대학교 평균),
 - 761천원 (방통대)
- 국립대학교 장학금 지급 및 자부담 비율(30%, 37개 국립대학교 평균)

구분	장학금 총당율	자부담율
학부	69.8% (방통대 32.7%)	30.2% (방통대 67.3%)
대학원	20%	80.0%

국립대 무상등록금화(전면) 소요예산

- 총 학부 학생정원: 376,835명 (법인대학 제외 37개교)
 - 방송통신대 제외 학부생: 284,760 명
- 대학원생: 60,000 명
- 학부생 연 평균 1인 등록금: 415 만원 (방통대 제외)
 - 학부생 연 평균 1인 장학금: 290 만원 (방통대 제외)
- 대학원생 연 평균 1인 등록금: 420 만원
 - 대학원생 연 평균 1인 장학금: 84 만원
- 학부생 무상 등록금 소요 재원: 4천 38억 8천 5백만 원
- 대학원생 무상등록금 재원: 336만원 * 60,000 = 2천 16억 원

국립대 무상등록금화(선택적) 소요예산

- 학업성취도 하위 10%에 한해 50%만 혜택: 200억원 축소
- 대학원 석사 2년 박사 3년간 만 무상등록금 혜택 부여: 200억원 축소

구분	예산(억 원)
학부	3,838
대학원	1,816
소계	5,654

- 수도권 국립대학 한시적 제외 시 추가 예산 절감 가능

예산 5,654억 원을 국가장학금 여유분에서 조달

년도	가용 예산 (국가장학금 잉여분 추정액)	소요 예산
2025	0.2조 원	1,968억 원 (학부 4학년, 대학원 절반)
2026	0.5조 원	3,735억 원 (학부 3, 4학년, 대학원 전면)
2027	1조 원	4,695억 원 (학부 2, 3, 4학년, 대학원)
2028	1조 원	5,654억 원 (학부 전면 실시, 대학원)

전문대학 무상교육

- 전문대학:133개교; 학생수 509,169명
-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 6,182,600원
- **3조 1,480억 원**(539,306명 × 평균 등록금 6,001,200원)
- 국가장학금: 1조원
- 실제 소요예산: 2조 1,480억원
- 지방 전문대 무상화: 6천억원 (22년 정의당 자료에 따른 추정)